

행정윤리관의 분석틀 모색 : 서양철학이론을 중심으로

임도빈*

〈目 次〉

- I. 서론 : 윤리분야 연구의 반성
- II. 행정윤리관의 비교기준
- III. 행정윤리관의 분석틀 : 네가지 유형화
- IV. 맺는말 : 종합적 비교

〈요 약〉

행정행위는 의사결정의 행위이고 의사결정은 여러 대안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 대안들은 각각 전제되어 있는 윤리적 가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어떤 대안이 어떤 윤리적 가치를 전제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분석틀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풍부한 문헌이 나와 있는 서양철학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행정윤리와 관련하여 가능한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윤리적 기반의 존재여부에 따라 기초주의 철학과 반기초주의 철학의 관점을 제시하고, 행위의 결과에 중점을 두는가 아니면 행위의 동기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목적론과 의무론의 관점 등이 의미하는 윤리관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유형론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대하여 논의한다. 다음으로 윤리적인 행동의 내용과 보편적 윤리기준의 존재여부, 그리고 윤리적 규범의 주·객관성 여부에 따라 절대주의, 상대주의, 공리주의, 이기주의라는 네 가지로 범주화하여 각각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는 가운데 기초주의-반기초주의의 축과 개인주의-공동체주의의 양축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윤리적 관점을 요약 정리한다.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I. 서론: 윤리분야 연구의 반성

윤리는 인간사회에서 옳고(right), 그른(wrong) 것, 혹은 좋고(good), 나쁜(evil) 것을 가리는 기능을 한다. 일반사회에서는 물론이고 공공분야에서도 무엇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한국행정학에서 다루는 행정윤리란 주로 공무원이 공복으로서 지켜야할 규범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행정학의 분과학문 중에서 행정윤리를 별도의 중요한 주제중의 하나로 다루는 것은 인사행정론이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국내 주요 인사행정 교과서중 대부분이 ‘행정윤리’를 독립된 장으로 다루고 있다(임도빈, 2001:123). 이들 교과서에서 다루는 실제 내용은 대체로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행동규범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특히 공직부패의 문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즉, 현재 인사행정론에서 다루는 행정윤리는 행정공무원의 개인수준에서 지켜야할 덕목과 규범을 당위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인사행정 과목에서 다루는 행정윤리 이외에도 국내 소수의 대학에서는 ‘행정철학’ 혹은 ‘행정윤리’라는 과목을 별도로 설치하여 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²⁾ 또한 행정학이나 정책학의 대부분의 교과목에서 행정(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측면에서 행정윤리와 간접적으로나마 관련되는 내용을 다룬다(예, 정정길, 2001). 그러나 일반적으로 ‘윤리’라는 개념은 한국행정학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 국민윤리를 체제순응적인 인간을 교육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바 있어서 ‘윤리’라는 단어자체에 대하여 갖는 거부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한국행정학의 실증주의적 경향이라고 생각된다. 실증주의도 그 자체로서 특정한 윤리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즉, 윤리의 문제인 선과 악의 문제를 가능한 한 과학적 진위여부(즉, 가설검증)라는 도구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이다(Anderson). 이러한 실증적 태도가 후술하는 윤리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는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만, 적어도 자연과학적인 과학성이 없는 주제는 연구관심에서 벗어남으로써 윤리적 문제를 제한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연구대상 혹은 범위라는 문제와는 별개로 어떤 윤리관을 택하든 윤리문제를 연구하는 방법론상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윤리적 주제를 과학적(즉, 실

2) 현재 ‘행정윤리’를 별도의 과목으로 한 학기동안 교육하는 학교는 5개교 정도에 불과하다.

중주의적)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인가에 대해 가치인식 불가론과 자연주의 윤리설로 구분할 수 있다(김항규, 1994). 가치인식 불가론이란 논리실증주의 철학에 입각하여 윤리는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서 행태주의가 그 예이다. 이 경우 윤리의 연구는 정상적인 인간에게 부여된 선천적 능력인 직관(intuition)에 의하여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하여 자연주의 윤리설은 가치가 사실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다고 본다. 즉, 가치는 심리적 사실이기 때문에 가치판단도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후기 행태주의나 후생경제학적 사고가 그 예이다(실제 연구의 예, 정철현, 1997).

해방 후 미국에서 도입된 한국행정학은 행정발전의 문제를 주로 논리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연구하여 왔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서행(1986:202)의 연구는 전체 84편의 분석대상논문 중 행정윤리에 관한 것은 8편에 불과하여 한국행정학계에서 윤리의 문제가 행정연구의 주요분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일정한 방향성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후의 연구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서 김호섭(1991), 박홍식(2000), 임의영(1996;2000) 등의 것이 있으나 이는 이론적으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혹은 조직에서 억압된 공무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를 해방시켜 진정한 윤리적 인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연구들을 제외하면 최근까지 한국행정학계에서 윤리의 논의는 전술한 바대로 인사행정론의 부패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기타 공무원들이 업무상 지켜야 할 행동규범(혹은 도덕규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행정윤리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행위나 문란한 사생활을 금지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행위는 곧 의사결정이라고 할 때, 공무원이 행하는 모든 의사결정은 크든 작든 모두 국민들에게 윤리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예컨대 어떤 공무원 개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자체보다는, 이러한 공무원이 어떤 건축허가를 해줬을 때(예, 서울 근교에 러브호텔 건축허가)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윤리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좀더 근본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라는 윤리의 기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즉, 공무원 개인행태를 통제하는 차원의 개인윤리보다는 정책의 파급효과를 다루는 윤리분석이 행정윤리의 핵심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를 확장하기 시작한 연구가 박정택

3) 물론 양자는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맞물려 있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1990), 김신복(1989), 노화준(1989;2001), 정용덕(2001), 최병선(2001) 등이다.

본 연구는 상술한 소수 최근의 연구들과 대체로 같은 시각에서 한국의 행정윤리문제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필요한 기초적인 작업의 일환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이 분야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서양에서 나온 각종 윤리적 논의들을 정리하는 틀을 모색하여 보는 것이다.

II. 행정윤리관의 비교기준

1. 비교기준 논의의 전제와 한계

윤리란 무엇이든 제약받지 않고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동물적 존재'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와의 대립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리스 시대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해온 것은 무엇이 '선'인가라는 질문이다. 즉, 고대부터 많은 철인들이 노력한 것은 결국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근본적인 윤리기준을 만들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현대 철학자 Alasdair MacIntyre는 "Enlightenment project"이라고 명명한다. 그러나 윤리문제에서 이러한 포부는 너무 야심적인 것이었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J.L. Badaracco, Jr., 1997:35). 선과 악에 대한 통합적이고 보편적 기준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각각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윤리의 내용은 나름대로의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직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윤리관의 다양성을 충실히 고려하고 집착하면 할수록, 이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유형화하는 작업도 그만큼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자신을 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주로 남을 비판하는 데 윤리를 거론하고 필요시 자신이 선호하는 윤리관을 인용한다. 사회구성원의 사고수준이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견 이러한 윤리논의가 공감대가 형성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지도자들 일반 국민이든 자신이 어떤 구체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 사람들의 행동내용은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윤리관의 혼란은 그 사회의 사고가 다양화될수록 더 심화

도 많이 있다.

된다. 최근 신세대의 사고나, 정보화, 민주화 등으로 부모와 자식간에 윤리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윤리문제의 논의가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복잡하게 하여 윤리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윤리문제를 논하려면 우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윤리관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 저 사람이 어떤 사실을 윤리적으로 보는가’를 논하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윤리관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추구하는 분석틀의 기능은 윤리논의를 풍부하게 하고 깊이를 더하게 하기 위해 일차적인 교통신리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 가지고 있는 행정윤리관을 총정리하는 윤리분석틀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매우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기초작업으로 지금까지 나온 서양의 윤리사상 혹은 윤리철학의 사조들을 요약 정리하는 것에 머무르려고 한다.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수없이 많은 윤리사상들을 분류하는데 있어서도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한 윤리론이 있을 수 있다. 각각 다양한 시각에서 윤리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비슷한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윤리관을 제시한 원저자들의 주장내용을 오해하거나 과잉 단순화할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윤리학자간에 이뤄진 논쟁이나 비판을 한 문헌은 한편으로는 원저자의 생각을 좀더 선명히 부각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더 혼란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필요한 것은 향후 한국행정윤리의 분석틀 정립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뤄진 서양윤리이론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과욕이라고 보고 그 중에서 한국행정윤리연구에 필요한 기초를 다진다는 실용적 목적에서 출발한다.

2. 기존 윤리관을 분류하는 데 사용된 기준들

행정윤리에 대한 연구는 유럽보다는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일정한 비교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사고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개념조차 독특한 편이다. 본론에서 윤리내용을 논의하기 이전에 이들 비교기준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크게 보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초주의,

목적론, 개인에 대한 관점 등 세 가지 기준으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다.

1) 윤리적 기반의 존재여부: 기초주의(foundational philosophy)와 반기초주의

‘어떤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혹은 기초)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느냐 여부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초주의와 반기초주의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윤리적 행동의 내용 혹은 기준이 사회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각 개인 혹은 소그룹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인 ‘주관적인 것’으로 존재하느냐에 대한 생각의 차이이다.

기초주의는 마치 검증가능성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어떤 법칙을 추구하는 논리실증주의와 같이 윤리에서도 어떤 추상적인 법칙이 존재한다고 믿고 이를 추구하는 입장을 말한다. 예컨대 기초주의의 윤리관에는 ‘공리주의’와 ‘절대주의’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행복을 통하여, 혹은 절대주의는 인류보편의 법칙을 실현시키는 것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윤리적 법칙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반기초주의철학(non-foundational philosophy)은 윤리에 대한 일반적 법칙(혹은 기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상대주의적 윤리관은 물론이고,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가 반기초주의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상대주의는 어떤 절대적이거나 불변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다.¹⁾ 도덕적 상대주의(moral relativism)는 모든 가치가 시간적·문화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이러한 상대주의는 결국 아무 것도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도덕적 허무주의로 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Fox, 1994: 95). 언뜻 보기에 반기초주의는 곧 윤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윤리적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윤리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행위의 결과인가 동기인가: 목적론과 의무론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마치 그것을 지향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목적론적 윤리설(teleological ethics)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윤리적이

1) 진리란 엄격한 검증(혹은 기각)을 통하여서만 입증되어야 한다는 논리실증주의(Ayer, 1936)도 ‘기각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한 공간과 시간에 국한되는’ 진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상대주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공리주의가 대표적인 예이다.²⁾ 목적론이란 윤리가 인생에서 도달해야 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목적이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본래적 선’ 혹은 ‘본래적 가치’라고 본다. 윤리성여부는 어떤 행위의 결과가 이 목적에 비취볼 때 어떠한가에 따라 평가한다. 따라서 이를 결과주의자(consequentialist)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윤리에서의 공리주의가 개인의 만족을 증진(최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행정윤리에서 목적론은 공공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국민의 선택을 충족시켜주는 것, 그리고 개인의 권력을 가져오는 것 등을 지칭할 수 있다³⁾.

목적론적 윤리론에 대비되는 것은 의무론적 윤리론이다. 의무론적 윤리설(deontological ethics)은 행위자체가 갖고 있는 윤리적 의무(즉,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결과와 관계없이’ 가질 수 있는 동기 혹은 의도)를 강조한다⁴⁾. 즉, 목적론적 윤리론이 결과적으로 ‘선’이라는 것에서 출발하여 이에 비취워서 윤리적 행동을 파악하는 데 비해, 의무론은 선험적인 ‘의무’에서 출발한다. 규칙자체에 선과 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대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고 그 행위의 결과보다는 그 행위자체에 의하여 선의 내용과 한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Fox, 1994: 90).

의무론의 대표주자로는 의무론의 두 축인 실존주의 윤리론과 계약론적 윤리론

- 2) 최초 원고에는 롤즈의 정의론도 이 범주에 포함시켰었으나, 익명의 심사자의 강한 비판으로 각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롤즈 자신도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정의론을 저술하였고 다른 학자들도 그를 의무론자로 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첫째 롤즈 자신도 ‘(자신의 정의론을 포함하여 - 필자주) 모든 윤리설은 그 결과를 고려하는 것’(롤즈, 1985:51)이라고 서술하는 것을 보면 목적론이 의미하는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며, 둘째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의 정의론인 ‘민주주의적 평등과 차등의 원칙’은 이상적 결과를 상정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정의론은 목적론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적어도 절차적 목적론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이 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 윤리관을 어느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예시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된다.
- 3) Goodpaster(1983:6)에 의하면 이기주의와 공리주의는 목적론을 구성하는 양대 윤리론으로서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라는 단일척도로 윤리성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일차적인 수혜자가 자신이나 타인이나의 차이가 있다. 19세기 철학자 Henry Sidgwick는 양자가 모두 중요한 것으로 보고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 자선원칙(principle of rational benevolence)과 신중성의 원칙(principle of prudence)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Goodpaster, 1983:6-7). 따라서 Sidgwick은 양자를 동시에 고려하여 통합하려는 이원론적 목적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 4) 칸트주의, 문화적·윤리적 상대주의, 그리고 아가페주의를 의무론의 3대 단순이론(three principal single-rule theories)라고 할 수 있다(Chandler R, C. 1994:148). 그러나 문화적·윤리적 상대주의는 일반적으로 비기초주의 윤리관으로 분류된다.

양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칸트의 윤리론을 꼽을 수 있다(Goodpaster, 1983:9).⁵⁾ 칸트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의지(free will)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를 일반화할 수 있는 보편법칙(universal law)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Kant적 윤리론의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예로 미국행정학자 K. Denhardt의 universal moral order를 들 수 있다(Fox, 1994: 91). 그녀는 절대주의적 윤리관은 윤리적 실재(reality)를 볼 때 플라톤의 이상(ideals)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 즉, 행정가가 의사결정을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윤리적 원칙(의무론)을 보편적 도덕질서로 보는 것이다. 그녀는 다른 모든 윤리론은, 심지어 공리주의까지도, 허무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또다른 의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Mary Parker Follet(1926)이다. 그녀는 과학적 관리론에 비판적이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는 없고 특정상황에서 양자가 이를 동의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피력한다.

3. 개인을 중시하는가 사회를 중시하는가

윤리는 본질적으로 사회와 개인간의 알력을 가정한다. 양자 중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개인주의적 윤리관과 사회적 윤리관으로 나눌 수 있다. 대체로 개인의 무한한 욕망을 자제하여 사회적 선을 달성하는 것을 윤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이다. 그렇다고하여 윤리가 가능한 개인적인 존재를 희생하여 타인 혹은 사회를 돋보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 학파를 비롯하여 현대의 실존주의 철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윤리학과들이 개인의 쾌락이나 개인의 존재를 중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인간이 '사회적 동물'임을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비롯하여 전체주의 사상들이 사회적 윤리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

5) Goodpaster(1983:8)는 의무론을 샤프트르로 대표되는 실존주의(existentialism)와 계약주의(contractarianism)로 나눈다. 실존주의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자아가 곧 윤리의 창조자라고 본다. 어떠한 일반적인 윤리법칙도 개인에게 당위론적인 행위를 규정해줄 수 없고 오직 진실한 자아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다. 예컨대, Harmon(1995)은 미국 관료들에게 제시하는 윤리적 기준이 불완전함을 지적하면서, 관료자신들이 실존주의적 존재로서 적극적으로 윤리를 실현하는 주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주의는 Locke, Rousseau 등의 사회계약론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사회의 공정성(fairness)을 실존주의에서 주장하는 자아의 진실성(authenticity)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계약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결정원칙으로서 공정성(정의)을 논하는 Rawls(1971)가 있다.

스도 '선'은 개인의 행복 혹은 쾌락(pleasure)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지만 이를 공동체에의 참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사회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본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 1983). 특히 사회계약론, 공동체주의 등은 물론이고 국가단위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중시하는 민족주의 사상은 행정윤리에서 중요한 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III. 행정윤리관의 분석틀 : 네가지 유형화

행정윤리관을 유형화하려면 여러 계파의 이론들을 포괄하는 동시에 유형간에 배타성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포괄성과 배타성이라는 입장에서 유형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분류기준들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첫째, 윤리적 행동의 내용을 인간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인가(즉, 절대적인가), 아니면 그 사회구성원이 만드는 것인가(즉, 상대적인가)라는 기준과, 둘째, 윤리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전체를 좀더 강조하는 입장인가 아니면 각 개인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가라는 기준을 채택하기로 한다. 위의 두가지 기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윤리관이 도출될 수 있는데, 각각의 의미를 서술하기로 한다.⁶⁾

1. 절대주의(칸트주의)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의 목적은 인간의 선의지(good will)이다. 선의지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조건하에서 자신의 욕구나 경향성을 극복하려는 의무에서 행위하는 것을 말한다(Kant, 1986). 즉 목적론적 윤리(teleological ethics)라기보다는 의무론적 윤리라고 할 수 있다(Chandler R, C. 1994). 칸트의 윤리철학은 매우 난해한 개념에 의하여 표현된다. 이 중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이하의 분석틀은 Sommers(1986)가 윤리 관련 주요 논문(저서)들을 발췌하여 편집한 저서의 목차 일부와 유사하다. 그러나 필자는 4유형 속에 있는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견 한국상황에 적합성이 의심되는 윤리적 이기주의도 그대로 포함시켰다는 약간의 의미를 부가했다고 할 수 있다.

1) 칸트 윤리의 주요 개념 :

- 주관적 원칙(maxim): 개인이 어떤 문체상황이 생기면 언제나 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 보편원칙(a universal law): 물리법칙과 같이 항상 예외 없이 발생하는 자연법칙(a universal law of nature)이 있고, 특정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의사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기술하는 보편법칙(a universal law of freedom)이 있다.
- 지상명령(categorical imperative): 정언적 명령 혹은 무조건적 명령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이는 조건적 명령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윤리의 주관적 원칙(maxim)은 보편화(즉, 보편법칙화)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언적 명령이란 이런 보편법칙 하에 모든 도덕적 행위에 의해 보편적으로 채택되도록 의지해야(will)하는 윤리적 행동을 지칭한다.

칸트는 이와 같이 인류의 보편원칙에 의하여 주어지는 지상명령(categorical imperative)으로서 윤리법칙이 있다고 본다. 쉬운 예로서 살인, 절도 등은 어떠한 상황(혹은 조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개인의 행동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윤리원칙에 부합되고 그 사람이 그 행동을 의도적으로 했을 때 윤리적이라고 본다(J.L. Badaracco, Jr., 1997:26).⁷⁾

칸트는 도덕적 진리는 절대로 내적 모순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보편가능성이라고 한다. 예컨대, '항상 다른 사람에게 기생하며 살아라'라는 명령이 보편가능성의 원리에 상충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면 결국 기댈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2) 윤리적 의무의 내용

칸트가 보는 윤리적 행위의 내용(보편원칙, 지상명령)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공자의 '仁' 개념을 비롯한 윤리사상, 기독교의 10계명, 부처의 자비 등도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너도 그렇게 하지 마라.⁸⁾

둘째, 인간을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으로 대해야 하지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윤리적 가치는 조건부(conditional)가 아니다.

칸트의 윤리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파산을 목전에 둔 사람이 속으로는 '장차 상환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친구한테 돈을 빌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 사회의 신용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에게도 피해가 올지 몰라서가 아니라(이것은 공리주의, 혹은 이기주의적 사고임), 바로 거짓말한다는 것 자체가 보편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칸트의 윤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완벽한 의무(perfect duty)와 상대적 의무(imperfect duty)가 있다.

<표 1> 칸트 윤리에서 의무의 종류

구 분	자신에 대한 의무	타인에 대한 의무
완벽한 의무	자 살	거짓말
상대적 의무	재능을 썩히는 것	도와주는 것

전자는 어떤 예외도 인정되지 않고 절대적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칭하고, 후자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가능한 한 그렇게 해야하는 것을 말한다(Feldman, 1978).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윤리와 타인에 대한 의무로 나눌 수 있다. 공무원은 자신에 대한 의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후자에 입각한 절대주의적 윤리관에 입각한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인간주의(인본주의)적 행정이라고 칭하는 것들이 있다.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사형제도문제, 사회보장정책,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 등이 예이다.

절대주의 윤리관은 위와 같은 논리체계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와 혼동

8) If you wouldn't want everyone else to act in a certain way, then you shouldn't act in that way yourself.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어떤 윤리적 행동이 그 자체에 가치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목적론적으로 해석해도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절대주의 윤리관이 좀더 부각되고 있는데, 그것은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 때문이다(노화준, 2001).

2. 공리주의(utilitarianism)

공리주의는 어떤 행위가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불행을 감소시키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것이고, 그 반대의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공리주의를 세부적으로 보면 많은 분파가 있으나 Jeremy Bentham은 쾌락주의적 공리주의(hedonistic utilitarian)를 창시한 대표적인 공리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1) 쾌락주의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의 출발점은 쾌락의 정도에 있다. 쾌락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Jeremy Bentham, 1986).

강도(intensity): 다른 조건이 같다면 쾌락의 강도가 강한 것(혹은 고통의 강도가 약한 것)이 선호된다.

지속성(duration): 오래 지속되는 쾌락이 좋은 것이다.

확실성(certainty or uncertainty): 실제로 발생할 확률이 높은 쾌락이 선호된다.

근접성(proximity or remoteness): 보다 가까운 쾌락이 먼 쾌락보다 선호된다.

이상 네 가지 기준은 관심대상이 되는 쾌락자체의 특성에 대한 기준이다. 이에 덧붙여서 쾌락자체보다는 그 쾌락에서 파생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의 기준이 있다.

다산성(fecundity): 다른(혹은 유사한) 쾌락을 유발하거나 동반하는 쾌락을 그렇지 않은 것보다 선호한다.

순수성(purity): 두 개의 쾌락가운데 고통과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쾌락만을 가져오는 것이 선호된다.

포괄성(extent): 관련되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은 쾌락이 선호된다.

물론 쾌락의 양과 질을 측정할 만한 조작적 정의를 제공해 주지는 않지만 벤담의 쾌락론은 실제 공리주의적 쾌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어떤 사례(예, 쾌락을 가져오는 행위)에 대하여 그가 제시하는 공리주의적 분석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느 행위에 예상되는 쾌락의 산출정도를 따져 본다.

둘째, 그 행위에 예상되는 고통의 산출정도를 따져 본다.

셋째, 첫 번째(위의 1.) 쾌락이 초래하는 쾌락을 따져 본다. 이것은 첫 번째 쾌락의 다산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첫 번째 고통(위의 2.)의 불순성(순수성의 반대)을 의미한다.

넷째, 첫 번째 고통이 초래하는 고통의 산출정도를 살펴본다. 이것은 첫 번째 고통의 다산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첫 번째 쾌락의 불순성을 의미한다.

다섯째, 이상의 과정에서 계산할 수 있는 가치의 총합과 고통의 총합을 계산한다.

여섯째, 많은 사람들을 상정하고 이들 중 쾌락을 느끼게 될 집단과 고통을 느끼게 될 사람들로 구분하여 총합한다. 이것은 포괄성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과정을 거치면 실제로 어떤 행동을 대상으로 공리주의적 윤리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게 된다. 장애아의 탄생을 인위적으로 억제한다면, 만약 그가 태어났을 경우 평생 받을 고통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나아가서는 그 사회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Peter Singer의 주장이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M. Specter, 1999).

J.S. Mill도 윤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최대다수의 사람들에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면 된다고 한다(J.L. Badaracco, Jr., 1997: 26). 그러나 벤담의 순수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에 대하여 Mill은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만족한 바보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 질적인 공리주의를 강조한다. 그는 만족과 쾌락은 다른 개념이고 본다. 즉, 쾌락은 만족뿐만 아니라 ‘충족되지 않은 욕구의 부재’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개념이다.

공리주의의 시발점인 쾌락이라는 개념은 후술하는 이기주의적 윤리관과 상당히 근접한다. 따라서 이기주의와 공리주의 윤리관은 서로 일맥 상통하는 점이 있다.

2) 공리주의의 종류

미국의 철학자 J.J. Smart(1920-)는 이러한 공리주의자적 입장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세련화시키고 있다. 그는 공리주의자들이 말하는 쾌락과 만족과 같은 ‘마음의 상태(state of mind)’는 그 자체의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심리상태가 반영되는 외재적인 가치(extrinsic value)라고 본다. 만족한 돼지와 불만족한 소크라테스의 비유나 Maslow의 욕구 5단계설과 같이 생리적인 쾌락을 하급적인 것으로, 정신적인 것을 고급인 것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물론 고차원적인 쾌락이 저차원적인 쾌락보다 풍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쾌락 자체가 저차원적(육체적)인 것인가 고차원적(정신적)인 것인가 보다도 공동체 혹은 전체인류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즉, 행위자체가 가진 가치보다는 행위의 결과가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는다.⁹⁾

이러한 관점에서는 공리주의를 개별행위 공리주의, 일반적 공리주의, 그리고 규칙 공리주의라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¹⁰⁾

- 개별행위 공리주의(act utilitarianism): 각 ‘행위자체’가 가져오는 결과가 공리주의적 기준에서 좋은가 나쁜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 일반적 공리주의(general utilitarianism): 어느 사례의 경우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사회전체에는 어떤 결과가 될 것인가를 고려한다.
- 법칙 공리주의(rule utilitarianism): 특정 사례(혹은 유사한 경우)에 어떤 윤리적 ‘법칙’을 준수한다면 그 사회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를 고려한다. 따라서, 특정행동은 그 자체로서는 덜 공리적이거나 해로울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나아가서 구성원들의 행복을 평균적으로 극대화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그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합을 극대화해야 하는가에 따라 입장이 나뉜다. 전자는 모든 구성원의 행복이 균일한 정도로 증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비하여(즉, 아주 행복한 자와 덜 행복한 자 사이에 개인간 차이가 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봄), 후자는 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차이를 인정하되 그 공동체 구성원전체의 행복 총량이 증진되면 된다는 것이다. 경제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모든 청소년에게 양질의

9) 이러한 관점에서 공리주의를 목적론적 윤리관이라고 분류한다.

10) Smart(1986)는 위 기준 중에서 개별행위 공리주의자의 입장을 취한다. 왜냐하면 법칙 공리주의는 규칙우선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교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고교평준화를 하여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중급의 교육을 제공하느냐 혹은 명문학교와 비명문학교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교육(여기서 어떻게 우수한 학생을 명문학교에 선발하느냐 등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을 하느냐라는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자. 전자가 평균적 공리주의 입장이고, 후자가 총합적 공리주의 입장이다.

Smart는 총합적 공리주의 입장을 지지한다. 만약 명문학교에 진학한 학생 중 한 명이라도 후에 노벨상을 받을 만큼 인류에 공헌할 일을 한다면, 모두가 중급교육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보다 인류의 행복증진(즉, 쾌락의 다산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공리주의는 이러한 다산성 효과를 무한정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제한된 합리성의 문제 때문에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ripples in the pond)이 일듯이 사고 가능한 근접한 부분에 국한하여 사고하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자들은 이러한 주먹구구식 계산을 통하여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을 하는 것이다.

이상의 윤리적 선택에서 고려한 많은 문제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가정적으로 분석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사고는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윤리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지는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실제상황에서는 이러한 윤리적 측면보다는 실제로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실증적인 효과분석을 하는데 급급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Fox, 1994: 91-92).

Buchanan and Tullock으로 대표되는 공공선택론은 공리주의적 윤리를 실현시키는 행정제도를 고안하는 이론의 한 예이다. 공공선택론은 선택의 자유(the principle of free choice) 즉, 개인들의 선택을 최대화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만족을 극대화할 것을 가정하기 때문이다(Pops, G. M. 1994:159).

이러한 공공선택을 주장하는 Ostrom(1974:131)의 논리구조는 다음과 같다(Pops, G. M. 1994:160)

- 정치권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권위는 분할해야 한다.
- 행정은 정치의 일부 혹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 조직은 정부기관간 서로 건전하게 경쟁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행정관료는 행정소비자의 선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장 최소의 비용을 갖는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부문 내부에서의 경쟁을 중시하고 수요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도 역시 이러한 공리주의적 윤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리주의적 정책은 다수의 행복을 중시하기 때문에 무고한 소수의 희생을 감수하게 한다(혹은 방치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Goodpaster, 1983: 6).

3. 윤리적 상대주의(ethical relativism)와 공동체주의

1) 윤리적 상대주의

상대주의적 윤리관 혹은 윤리적 상대주의의 원형은 Herdotus(485-430 BC)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누구든지 세계 모든 나라의 것 중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은 믿음의 체계(set of beliefs)를 택일하라고 한다면 결국 자기 모국의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Herdotus, 1986). 식인종의 예와 같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보다는 ‘관습’이 ‘모든 것의 왕’(the king of all)이라는 것이다.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윤리란 어느 사회에서 편의상 만들어지는 것으로 관습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회에서 윤리적인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비윤리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은 각 사회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맥락을 벗어나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윤리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절대주의 윤리관과 대조되는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사회에서 ‘생성’된 윤리적 행위의 내용(예, 살인하지 마라)이 우연의 일치로 절대주의 윤리관에서 주장하는 윤리와 일치할 수도 있다.

윤리적 상대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는 ‘국화와 칼’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Ruth Benedict (1887-1948)라고 할 수 있다.¹¹⁾ 그녀는 황홀함(trance)을 경험하는 것과 동성애자들에 대한 평가가 어떤 사회에서 초래하는 갈등의 정도문제는 그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고 그 지역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현대 서구사회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황홀경에 빠지는 행위도, 서구중세사회에서는 성인(saint)의 한 요건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동성애자도 그 자체에 문제가 있

11) Ruth Benedict의 다음과 같은 묘사는 상대주의적 윤리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Kwakiutl족은 자기 친척의 죽음은 그 원인이야 무엇이든 수치라고 생각하고 타인의 죽음으로만 이를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예컨대, 어떤 추장의 여동생과 그 딸이 호수에서 익사하자 용사들이 비상상태로 돌입하여 다른 종족의 남자 7명과 어린이 2명(당시 잠들어 있었음)을 죽이고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고 한다. 그 사회의 평안을 위해서 무고한 희생도 정당화된다고 보는 예이다.

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플라톤도 ‘Republic’에서 동성애주의자들에 관한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각 사회에 따라 다르게 윤리성을 인식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관습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 선호한다(Fox, 1994: 139). 역사적으로 보면 양자는 동의어이다. 따라서 정상적(normal)이라는 개념은 좋다(good)라는 개념의 하나의 변종(variant)인 것이다.

각 사회는 다소간 작동하는 문화적인 잠재력이 있다. 그 사회가 잘 통합된 사회라면 이러한 특정 유형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경향이 더욱 더 강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고, 그 결과 이에 벗어나는 다른 문화를 거부하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정상적인 것(normal)이 되는 것이다.

공리주의가 그 사회구성원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윤리적인 행위로 본다면, 상대주의는 (절대론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어떤 행위의 윤리적 가치가 어떠한가를 불문하고) 그 사회의 질서나 결속을 강화시키는 것은 윤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의 질서나 결속력의 강화가 그 구성원들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면 공리주의와 상대주의는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상대주의적 윤리관은 윤리의 내용이 그 사회의 특수성에 구속되고, 사회의 구성원은 그 사회의 윤리내용을 만드는 동시에 이에 구속받는 존재이다. 그렇다고 하여 상대주의적 윤리관을 인류학적으로 특수한 연구대상이 되는 원시사회에만 적용된다고 보면 잘못이다. 예컨대,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도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볼 수 있다. 즉, 좀더 구체적인 예로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절도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비윤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일부일처제 결혼제도를 택하고 있어도 간통을 비윤리적으로 보는 정도의 차이는 동양과 서양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상대주의적 윤리관의 예로 해석할 수 있다.

상대주의 윤리관은 ‘감정주의’(emotivism)와 그 이외의 것으로 다시 양분할 수 있다. 전자는 모든 도덕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non-sense)으로, 윤리적으로 강한 반응은 감탄사와 같은 감정적 반응과 똑같이 진리라는 차원에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 감정주의를 제외한 상대주의로서의 후자의 범주에는 실존주의적 현상학(Fox, 1980), 해석학(Bernstein, 1983), 공동체주의(MacIntyre, 1984) 등이 있다. 이들은 모든 가치는 그 자체로서 모두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인간사회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보는 점에서 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다.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근대사회의 허위적 윤리체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사람은 Foucault (1975)이다. 그는 어느 사회에서 비윤리적 행동을 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감옥의 죄수, 정신병원에 수용된 정신병자 등의 분류기준자체가 이미 그 사회 (특히 왕과 같이 지배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특히 이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서 지식과 지식인들이 활용된다는 것이다.

2) 공동체주의

윤리적 상대주의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와 가깝다. 공동체주의는 다른 사회와 구별되는 공동체단위를 가장 중요시하는 입장을 취한다. 현대의 공동체 사회에서 어떻게 정의를 실현시킬 것인가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는 Walzer(1983)이다. 그는 한 공동체사회를 이끄는 정의(justice)의 기본원리로 ‘아무도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의하여 지배받아서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 사회의 다양한 국면(sphere)의 재화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활동을 하는데, 각각의 국면에서는 그 국면에 적합한 분배원리에 의하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Walzer, 1983: 3-13). 즉, 한 국면의 분배가 다른 국면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면 지배(domination)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예컨대 공직자가 공직자라는 사실에 기인하여 다른 가치(예, 富, 문화 등)를 더 많이 갖게 된다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Walzer는 ‘단순한 평등’(simple equality)에 대비하여 정의로운 공동체를 실현시키는 원리로서 ‘복잡한 평등’(complex equality)을 제창한다. 그러나 Dworkin(1983)은 이러한 복잡한 평등성은 달성하기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분배의 정의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요컨대 공동체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은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본다(Walzer, 1983). 그러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즉, 원자화된 개인)을 중시한다.
- 개인과 공동체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과관계가 형성된다고 본다. 모더니스트적 사고는 개인을 적어도 지배적인 변수로 보는 반면, 공동체주의는 공동체를 우선시하거나 적어도 개인과 공동체를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는 합리적 선택론과 같은 이론을 과소 평가한다.
- 공동체주의는 윤리를 일종의 목적론적인 입장에서 본다. 선을 내면화는 것은

윤리의 과업이라고 보고, 이것은 곧 질서 있는 공동체사회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을 하라’(do this)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되라’(be this)라는 목적론적 표현을 사용한다.

그런데 공동체주의에 대하여 제기되는 비판점은 다음과 같다(Fox, 1994: 97).

- 근대윤리의 문제가 원자화된 개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면, 공동체주의도 역시 공동체에서 파생되는 추상화(abstraction)된 개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 어느 특정 공동체의 측면에서 보면 그 사회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입장(시각)을 허용하지 않는다.
- 공동체를 잘 조화되는 상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주의화 될 가능성(totalitarian possibilities)이 있다. ‘공동체’를 ‘국가’로 놓는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발달된 후기산업자본주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대중사회에 있어서 공동체주의는 너무 이상적인 것일 수 있다.

4. 이기주의(egoism)¹²⁾

상술한 세 가지 윤리관의 공통점은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이기주의를 부정적으로 보고, 일종의 이타주의적인 행위를 윤리적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이기주의적 윤리관은 이타주의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인간의 본성인 이기주의에 입각하여 윤리적 행위라는 문제에 접근하는 입장이다.¹³⁾ 따라서 상술한 윤리설들 입장에서 보면 이기주의는 ‘비윤리’와 동의어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기주의적 윤리관은 바로 이타주의를 비판하는 데서 출발한다. 즉, 인

12) BK21세미나에서 이기주의를 다른 윤리관과 같이 하나의 윤리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나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기주의적 윤리의 논리는 결국 공리주의와 만나게 되어 구분이 애매하고, 그 자체를 비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서양윤리의 특성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더구나 이기주의적 윤리관은 이미 행정현장에 도입되어 있다. 행정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명목하에 추진되는 연봉제, 성과급제 등 인사상의 인센티브제도들도 공무원의 이기주의적 윤리관을 기초로 한 제도이다.

13) 최근 이타주의적 윤리체계가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기주의적 윤리관에 입각한 법제도가 등장하고 있다. 효도상속제가 그 예이다. 효도상속제는 노부모를 부양한 자식에게 상속 면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이기심에 효(윤리)를 결합하는 것이다.

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이것을 비판 혹은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기주의적 인간을 비윤리적이라고 보고 이타주의를 윤리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다른 윤리관의 출발점 혹은 기반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의 본질을 직시하는 윤리현실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기주의적 윤리관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Hobbes(1986)는, 인간에게 있어서 개인의 욕구가 유일한 가치이며 자기보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선(善)이라고 본다. 즉, 자연적 상태에서는 개인의 생존조차 보장되지 않는데 이타주의만 추구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만약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악이라면 곧 자신의 생존을 추구하는 것이 악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모순 속에 빠진다는 것이다.¹⁴⁾ 즉, 이타주의는 자아존중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개념이다. 홉스의 자연권 개념은 자기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히 행정관료를 비롯한 지도자의 윤리에 대하여 이기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키아벨리이다. 그는 ‘군주론’에서 권모술수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이익(권력욕)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Lerner, M., 1950).

이기주의적 윤리관은 이타주의(altruism)가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재비판(거부)하는 내용을 통하여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즉, 이타주의는 자기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서 이기주의를 죄악시한다. 사업을 통하여 오직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자나 도둑질을 하여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모두 이기적이라는 측면에서 비윤리적이라고 본다(Ayn Rand, 1986). 그러나 이것은 돈을 버는 목적에 대한 비판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기심 자체보다는 오히려 돈을 버는 방법이나 수단에 대한 비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기주의적 윤리관에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사익을 어디까지 추구해야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이다. 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도 이기주의적 개인을 상정하는 것이다. 스미스는 이타적 행위는 무조건 도덕적이고 이기적 행위는 무조건 이타주의라는 단순도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스미스는 ‘상상 속의 공정한 관찰자’(supposed impartial spectator)라는 개념을

14) 물론 개인의 생존을 위하여 이성에 의하여 발견된 계율인 사회계약(social contracts)은 개인적 자연권의 상호포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계약을 강제하는 계약강제기관으로 국가의 역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그 자체로서 ‘자연적’이라거나 ‘도덕적’이라는 생각과는 대조된다(정현식 외, 1997: 34-35).

동원하여 이기심의 원리에 의하여 행동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도 조화와 질서를 찾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공정한 관찰자란 일종의 양식을 가진 타인을 가정하는 것인데, 행위자는 이 관찰자와 서로 감정을 교환하고 양자의 감정이 일치해야 한다는 동감(sympathy)의 원리가 바로 윤리적 행위로서 적정성을 얻게 되는 장치가 된다는 주장을 한다(정현식 외, 1997: 60-69). 즉, 스미스는 유치한 이기심이 아니라 동감의 원리에 바탕을 둔 이기심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는 최고의 덕목인 인애심(仁愛心)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이기주의의 의미는 분석의 단위를 개인의 차원에 국한시킬 때에는 다른 윤리관과 구분되지만, 어느 행위를 당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전체가 가지는 이익으로 확대하여 생각한다면 상술한 공리주의적 윤리관과 공통되는 점이 많이 있다. 즉, 사회의 이익이 곧 자신의 이익이 되고,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익까지 고려한다면 공리주의나 상대주의적 윤리관과 일맥상통하게 된다.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이기적 인간을 기초로 하는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경제사회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공리주의적인 측면에도 부합되므로 정부주도의 경제운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 예이다(최병선,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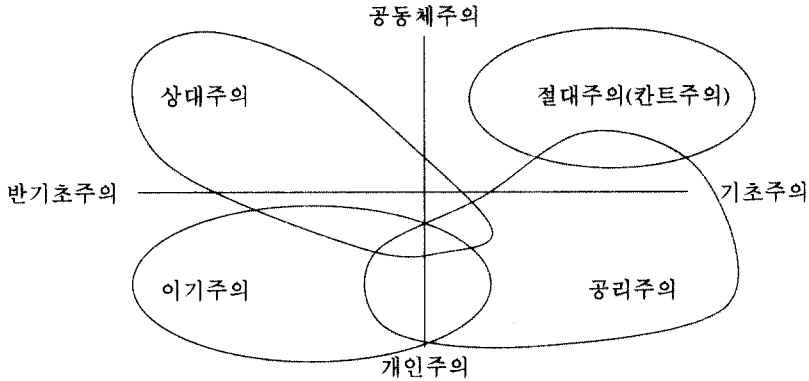
IV. 맺는말 : 종합적 비교

서양의 윤리사상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윤리의 실체를 어떻게 보느냐의 차원과, 개인과 사회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 등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의 내용이 시간적·공간적으로 불변한다.’라고 보는 입장과, ‘윤리적 행동이 가변적이다’라고 보는 입장의 차원이 있다. 이는 전술한 기초주의 철학(foundational philosophy)이라는 표현과 유사하다.

둘째, ‘행위자 자신’이라는 개인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과 개인보다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의 차원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을 기초로 하여 위에서 논의한 것들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윤리사상의 종합

우선 위의 도식은 여러 입장을 매우 단순화시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분류한 특정 윤리관의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윤리관이 위의 4 분면 중 여러 곳에 관련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다시 정리하기로 한다.

먼저, 이기주의는 다른 종류의 윤리관에 비하여 개인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즉, 생존권을 비롯한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충실히 행동하는 것이 윤리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기주의는 다른 종류의 윤리관이 근거로 하고 있는 이타주의를 비판하면서 현실적인 윤리를 주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오직 개인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행동하여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게 되면 이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비판한다. 이런 면에서 공리주의 등 다른 윤리관과 일맥상통한다.

다음으로, 상대주의는 윤리가 특정시점과 장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공동체주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예를 들면,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공리주의적 사고를 하거나 혹은 이기주의적 사고를 한다면 그 사회에 통용되는 상대주의적 윤리의 내용은 곧 공리주의나 이기주의가 될 수 있다.

공리주의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최대다수의 행복을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윤리가 있다고 보고 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개인이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공동체를 상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위 그림에서는 분석의 초점이 각 개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2사분면에 위치시켰다.

절대주의는 상대주의 윤리관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관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지켜야할 지고지순한 윤리의 내용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는 일견 윤리를 개인의 차원에서만 생각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절대주의 윤리관의 대표자인 칸트의 생각에는 국가사회가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위 그림과 같이 분류했다.

본 연구는 서구에서 논의되는 윤리관을 유형화하여 비교했다는 의의가 있다. 모든 행정행위는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고 윤리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행정학이 주장하는 각 내용들이 대체로 어느 유형의 윤리론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음미해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개별 정책뿐만 아니라 행정이 국가사회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도 윤리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행정을 연구한다면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부분적으로 언급되기는 하였지만 각 서양윤리사상에 대하여 서술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의 여지가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은 본 논문의 1차적 목적은 원저자의 주장을 그대로 잘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유형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작업이었기 때문이다. 유형론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원전의 의미파악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둘째, 이론적으로 볼 때 네 유형이 서로 배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대로 약간 중복되는 점이 많이 있다.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유형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형론의 유용성에 지대한 지장을 준다. 이 문제는 유형론을 세련화시켜가면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그러나 다양한 윤리관점에서 보면 윤리적 행동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가치다원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즉, 이제 공무원이 해야할 일은 ‘옳은 것’과 ‘그른 일’을 구분하는 일보다는 (한 윤리관에서 보면) ‘옳은 것’과 (다른 윤리관에서 보면) 역시 ‘옳은 것’사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Badaracco, Jr., 1997.).

셋째, 이상에서 제시한 윤리관들이 한국행정에서 필요한 윤리적 관점을 포괄한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일단 동양과 서양의 윤리관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윤리유형론에 입각하더라도 동양의 윤리관에서는 칸트주의와 공리주의적 사고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서양의 윤리에서는 이기주의와 공리주의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유

교적 윤리관이 지배하고 있었으나 최근 서구윤리의 영향으로 이기주의적 혹은 공리주의적 윤리관이 유입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행정에 맞는 윤리분석틀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처방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참 고 문 헌

- 김항규, 1994. 행정철학, 서울: 대영문화사
- 김신복, 1989. “정책분석 및 연구의 윤리성”, 행정논총, 제27권 2호
- 김종술, 1992. “대학과 중용을 통해서 본 공무원의 윤리관:현상학적 해석”, 한국행정학보 제25권 4호
- 김호섭, 1990. “행정문화의 비판적 수용을 통하여 본 행정윤리의 방향”, 한국행정학보, 제24권1호
- 김호섭, 1991. “행정책임의 윤리”, 한국행정학보 제25권 3호
- 노화준, 1989. “한국에 있어서 정책분석 윤리문제의 성격과 발생양태”, 행정논총, 제27권 2호
- 노화준, 2001. “과학기술윤리와 국가의 역할: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39권4호
- 론즈 (황경식 역), 사회정의론, 서울:서광사, 1985
- 박정택, 1990. “정책의 윤리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4권2호
- 박홍식, 2000. “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과 행정윤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편, 2000.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서울: 박영사
- 아리스토텔레스(최명관 옮김), 1985. 니코마코스윤리학, 서울:서광사, 1985
- 유홍림, 1990. “공무원의 도덕적 행위연구에의 심리학적 접근방법의 적용가능성 검토”, 한국행정학보, 제24권 3호
- 이문영, 1996. 논어맹자와 행정학, 서울: 나남출판
- 이서행, 1986. “한국행정윤리 연구실태에 관한 고찰”, 한국행정학보, 제20권 1호
- 이상안, 2000. 공직윤리봉사론, 서울: 박영사
- 임도빈, 2001. “신인사행정체제의 모색”, 행정논총, 제39권 1호
- 임의영, 1996. “행동, 행위, 프락시스 개념의 행정윤리적 정향” 한국행정학보, 30권 3호

- 임의영. 2000. "행정윤리론의 대안적 인간관 : 정치적 실존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 행정학보 제33권 3호
- 전수일 외, 2000. 공무원 관리론. 서울 : 대영문화사
- 정용덕. 2001. "행정윤리의 다면성", 행정논총, 39권 4호
- 정정길. 2001.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서울 : 대명출판사
- 정철현. 1997. "환경공무원의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1권 1호
- 정현식, 유입수, 김광수, 1997. 정치경제학과 경제주의. 서울 : 서울대 출판부
- 최병선. 2001. "정부주도의 경제사회운영과 행정윤리", 행정논총 39권4호
- 홍준형. 1996.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행정논총 34권1호
- 황경식, 정원규 (역) (D. F. Thomson저). 1999. 공직의 윤리. 서울 : 철학과 현실사
- Anderson, Walter Truett, "Four Different Ways to Be Absolutely Right", Unpublished manuscript
- Badaracco, Jr., 1997, Defining Moments: When Managers Must Choose Between Right and Right,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Benedict, R. 1986. "A defense of ethical relativism", in Sommers(ed.), Right and wrong: basic readings in ethics,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Bentham, Jeremy. 1986. "The principle of utility", in Sommers(ed.), Right and wrong: basic readings in ethics,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Boiling T. E. & J. Demsy. 1981. Ethical Dilemmas in Government: Designing an Organizational Response, Public Personnel Management
- Chandler R, C. 1994, "Deontological Dimensions of Administrative Ethics", in T. Cooper(ed.) Handbook of Administrative Ethics, New York: Marcel Dekker
- Cooper, Terry L. 1982. The responsible administrator: an approach to ethics for the administrative role, London: Kenniat press.
- Dworkin Ronald & M. Walzer, 1983.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Nyrev. Inc
- Finer, Herman, 1941.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in Democratic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ve Review, Summer
- Foucault, M. 1975. Surveiller et Punir, Paris: Gallimard
- Follet, M. P. 1926. "The Giving Orders", in J.M. Shafritz and A. C. Hyde(ed.), 1997. Classics of Public Administration,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Fox, Charles J. 1994. "The use of Philosophy in Administrative Ethics", in Cooper e d. Handbook of Administrative Ethics, New York: Marcel Dekker
- Feldman, Fred, 1978. Kant's Ethical Theory: Exposition and Critiqu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Goodpaster, Kenneth, E., 1983, "Ethical Frameworks for Management", Class Note, Harvard Business School, November 3
- Harmon, M. 1995. Responsibility as Paradox: A Critique of Rational Discourse on Governance, New York: Sage
- Hart, D.K, 1994. "Administration and the Ethics of Virtue in All Things, Choose First for Good Character and Then for Technical Expertise", in T. Cooper(ed.) Handbook of Administrative Ethics, New York: Marcel Dekker
- Hobbes, T. 1986. "Of the State of Men Without Civic Society", in Sommers(1986), Right and wrong: basic readings in ethics,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Kant, I. in K. Abbott(trans.by). 1986,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in Sommers, Right and Wrong, Basic Readings in Ethics,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Kekes, J. 1988 The Examined Lif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Lerner, M.(ed.) 1950. Machiavelli's The Prince and the Discourses, New York: The Modern Library
- MacIntyre, Alasdair. 1984.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second ed.,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inc, Alain. 1995. L'ivresse democratique, Paris: Gallimard
- Ostrom, Vincent, 1974, The Intellectual Crisis in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revised edition, Al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Peter Madisen and Jay M. Shafritz(ed.) 1992. Essentials of Government Ethics. New York: Penguin books
- Pops, G. M. 1994, "A Teleological Approach to Administrative Ethics" in T. Cooper(ed.) Handbook of Administrative Ethics, New York: Marcel Dekker
- Rachels, James. 1971. "Egoism and Moral Skepticism", in Steven M. Cahn(ed.), A New Introduction to Philosophy, Harper & Row, Publishers, Inc.
- Rand, Aryn, "The virtue of selfishness", in Sommers(1986), Right and wrong: basic readings in ethics,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Rawls, John.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ohr, John, 1998. *Public Service, Ethics and Constitutional Practice*, Lawrence,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 Sommers. 1986. *Right and wrong: basic readings in ethics*,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Specter, Michael. 1999. "The Dangerous Philosopher", *The New Yorker*, September 6
- Thompson, Dennis, F. 1997. "The Possibility of Administrative Ethics", in J.M. Shafritz and A. C. Hyde(ed.), *Classics of Public Administration*,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Walzer, Michael. 1983. *Spheres of Justice*, New York: Basic Books, Inc.
- Williams, Bernard "An outline of a System of Utilitarian Ethics", in J.J. C. Smart & Bernard Williams(ed.), *Utilitarianism: For and Against*, Cambridge University Press